

기고

임 홍 태 영암소방서 119구조대장



폐기물 화재,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폐기물(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등 폐기물) 처리장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북 의성·성주·영천, 경기도 화성·고양, 울산, 전북 군산, 강원도 원주 등 전국의 폐기물 처리장과 최근 우리지역의 폐기물 처리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소방력이 집중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폐기물 현황(2018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자료)을 보면 생활폐기물(13%)과 사업장 등 폐기물(87%)

로 폐기물 발생 주체별로 생활폐기물(1일 1인 배출량: 1.01kg)과 사업장 등 폐기물(1일 배출량: 361.136t), 처리내역을 보면 소각(5.8%), 매립(7.8%), 재활용(86.4%)되고, 처리주체별로는 자가처리(8.7%), 지자체(9.6%), 민간처리업체(81.7%)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폐기물 화재는 대기오염과 소화수에 의한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2차 피해를 발생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올 3월에는 경북 의성군의 폐기물 처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출동한 소방대가 수 시간동안 화재진압을 하였고, 미 CNN 방송에서는 경북 의성의 방치된 거대한 '쓰레기산' 문제를 집중 조명하였다.

또한,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132킬로그램으로 세계최대 수준이라는 점과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은 당초 허가량의 34배가 넘는 쓰레기가 쌓였으며, 각 지역의 폐기물 처리장에도 허가량보다 많은 폐기물이 쌓여 이로

인해 쓰레기 더미를 둘러싼 법적 다툼과 지역사회 갈등, 방치된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생긴 가스로 화재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생활의 편리성으로 인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과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수많은 폐기물은 전국의 폐기물 처리장에 쌓여 있고 폐기물이 분해되면서 생긴 가스로 인해 자연발화하거나 자체소각 중 연소확대되어 소방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폐기물과 관련된 기관에서는 철저한 분리수거를 실천, 감시하도록 하고 위반 할 경우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며, 초등교육부터 의무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견학하여 분리, 배출하지 않으면 약칙과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걸 현장에서 보고 배우도록 하자.

당장 개인의 편익만을 생각하기 보다는 후대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 주어야 한다.

지금부터 철저한 분리수거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자.

社 說

‘도로 위 폭행’ 엄단해야 한다

‘도로 위 폭행’이 도를 넘어 서고 있다. 걱정이 크다.

운전 시비로 상대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차량을 파손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고가 최근 2년 동안만 1000여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2018년 전국에서 보복운전으로 인해 형사입건된 사건 8835건 중 운전자의 신체나 차량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가 1050건에 달했다. 보복운전 범죄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4432건, 4403건이 발생해 해마다 4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2039건(23.1%)이 발생한 ‘고의 급제동’과 1095건(12.4%)이 일어난 ‘서행 등 진로 방해’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보복범죄로 조사됐지만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 비중도 만만치 않았다.

2년간 발생한 보복운전 범죄 8835건 중 기소된 경우는 절반 정도인 4325건(49%)이었다.

기소된 사건 중 15건을 제외한 대부분(4310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2017년부터 특경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진로방해, 고의 급제동,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를 실무상 보복범죄로 분류해 통계로 관리해오고 있다.

도로 위 폭행 사건은 잇달아 일어나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

도로 위 폭행은 가해·피해 운전자 뿐 아니라 동승 가족까지 위협한다.

운전자에 대한 폭력 행위는 ‘3년 이상 징역’(운전자 폭행·상해 혐의)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보복운전·폭행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미온적이었던 만큼 법원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난폭·보복 운전 행위는 운전자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2차 사고로 이어지는 등 목숨까지 잃게 할 정도의 범죄 행위임을 명심하고 이에 따른 사법처리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근절, 관심과 신고로부터

최근 스마트폰 보급 및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늘어나면서 ‘불법촬영’ 등 범죄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특히 피해자가 짝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불법촬영 등 성범죄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불법촬영 등 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먼저 인적이 없는 곳에서 오래 머물고 있는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밝은 시간 어두운 곳을 혼자 배회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휴대전화에 112를 단축번호로 저장하거나 호루라기, 경보기 등 호신용품을 휴대하는 것도 예방의 좋은 방법이다.

또한 공공장소의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칸막이의 위 아래를 잘 살펴 휴지통에 신문지가 덮여 있을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 촬영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촬영이 이뤄지는 사실을 목격했을 때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범죄 특성상 피해자본인은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발견할 경우, 피해자를 대신해 이를 제지하고 피해사실을 알리고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

최근 보성경찰에서도 울포해수욕장 등 관내 피서지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촬영 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설치여부의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여성·형사·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보다, 언제든 나와 내 가족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사전에 방이 필요하다. 무더위를 피해 떠난 피서지에서 모두가 즐거운 여름휴가가 되기를 바란다.

민은정 / 보성경찰서 경무계 경사

‘메신저 피싱’ 알고 보면 예방 할 수 있다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었지만, 한편으로 다양한 신종용어와 함께 수많은 사이버 범죄를 만들어냈다.

최근 남녀노소 모바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메신저·메시지를 이용한 일명 메신저 피싱이라 일컫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범죄자들은 어떻게 피해자와의 인간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일까. 이들은 안드로이드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는 휴대전화들의 주소록이 연동되는 구글 주소록, 네이버 주소록 또는 아이폰 운영 시스템의 아이클라우드에서 개인정보를 얻는다.

대부분 사용자들이 주소록을 작성할 때 기억하기 쉽도록 본인과의 관계를 적어 놓기 때문에 관계의 유추가 쉬워진다.

그러므로 메신저 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첫걸음은 주소록이 보관되어 있는 구글, 네이버, 아이클라우드 등과 자주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 혹은 애플리케이션의 아이디, 패스워

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카오톡의 경우 메신저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접속 사용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사진 밑에 지구본 표시를 하고 있으며 새로 추가된 사용자와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용자를 추가해야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지만 사기범의 감언이설로 예방방법을 확인할 수 없을 가능성 있어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예방법이다.

친한 지인, 오늘 아침까지 같이 있던 가족이라도 메신저를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만약 이미 계좌로 돈을 송금했을 경우,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한 뒤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거나 각 은행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다운 받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금융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다.

황민애 / 나주경찰서 수사과 경위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기출신고 182	▲인광의료로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반)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경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브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편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